



문재인 정부의 위기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허상적인 국정원 ‘개혁’

관련 기사 2, 3면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4면

사유리의 비혼 출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
6~7면

국제
타이 민주주의 투쟁 8~9면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10면
폴란드 낙태권 투쟁 11면
이스라엘의 이란 핵과학자 살해 11면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형 선고 7면

노동자 운동
이케아의 열악한 노동 실태 14면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투쟁 14면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12면
경사노위 직무규제 합의 15면

탄력근로제 악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1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팬데믹, 부채,
경제력
10면

낙태죄 유지와
낙태권 운동가
탄압
2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 개혁 아니다

김승주

민주당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퇴장하거나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정보위) 통과를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댓글 조작 등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특히 저항 세력)을 사찰하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자행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약속이었다. 그 결과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국내 정치 관여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 국정원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를 보면, “국내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전복)”라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수사”가 “정보 수집·작성·배포”로 바뀌었다. 또 기존에 있던 사법경찰관(대공수사권)이 삭제됐다.

정부·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도 금지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 보면 사실이 아니다.

개정안에서 국정원 직무 범위에는 “형법 중 내란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4조)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가 그대로 남았다. 이게 국내 정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정원-경찰-국군 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삼각 공조가 국내 대공수사 시스템이었으므로 대공수사권 이전 자체가 대공수사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팬데믹과 같은 신안보분야의 정보 수집” 등 국정원의 임무는 추가됐다.

특히 “대테러 업무”가 유지됐다. 이는 **테러방지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한다.



국가 관리들은 국내 저항 세력을 “안보 위협” 세력으로 본다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모호한 규정이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에게 강력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전화·SNS 등 통신 이용, 금융 거래,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정원장에게 테러 대응에서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조처들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명분 하에 실제 테러 행위가 없어도 취해질 수 있다. 국정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말이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업무에 관한 한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요컨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금지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수사권은 없어졌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얼마든지 수사에 준하는 정보 수집과 **사찰**이 가능하다. 관계기관을 동원하는 국가 전반의 보안 업무 기획·조정도 가능하다. 국정원 직원의 무기 소지도 여전히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런 형식적인 수준의 약화일 뿐인데도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며 엄살을 떨며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국가 안보에 무능하다는 식으로 흠집 내려는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은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려면 예산과 인력도 경찰로 보내야 한다고 정부안을 비판한다. 그러나 국내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옛 이름)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가 4년 만에 되살린 김영삼 정부의 사례를 보거나, 앞으로 순차적으로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이 퇴직해 경찰의 안보수사본부로 이전할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우파의 반대는 매우 위선적이다.

또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에 보듯이 우파는 경찰이 보결 선거나 대선에서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걱정한다.

국정원 개혁, 가능한가

과연 국정원을 대외 안보 정보만 수집하는 순수 정보 기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정의당은 국정원 임무를 대외 안보 정부 수집 수준에 한정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아쉽지만 환

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 논리를 수용하고 국가 기관이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하면, 그 기관들이 국내 정보만 꼭 집어 모으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 기관들이 통제하는 국가 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친자본주의 정당들이 지배적인 의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견제하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

지배자들의 관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은 국경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국내 저항 세력들도 국가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다.

앞서 언급한 테러방지법이 한 사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14일 파리 참사(극단적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인 ISIS이 프랑스 파리에서 벌인 테러)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국정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주노동자를 근거도 없이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된 대상이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옮겨간 것은 금방이었다. 일주일 뒤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집회(이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를 “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얼마 뒤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민주당의 반동적 과거

과거 민주당 정부들도 국가 보안에 관한 악법들(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과 검·경·정보기관이 갖는 억압적인 사찰 권한에 대해 늘 반동적인 입장에서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신이 국가 탄압의 피해자였고, 집권 초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5년 동안 전임 정부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그 수는 1058명에 달했다. 김영삼이 날치기한 안기부법(대공수사권 부활)은 위헌 판결은 받았지만, 김대중은 재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국정원은 영장 없이 ‘긴급

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국정원은 이런 합법적 권한을 가졌지만 불법도 술하게 저질렀다. 그래서 이 시기 국정원장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국정원의 상시적 감찰 대상이 어찌나 많았는지 노무현도 포함될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초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유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무려 152석을 얻어 대승했지만 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고 해서 진보 진영을 묶어 두고는 변죽만 울렸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에 벌어진 반전 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 FTA 반대 운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데서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휘둘렀다.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 강행을 속도를 내던 2015년 말, 문재인은 민주당의 당대표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표적 직전에는 나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시간을 끌었다. 이조차 딱 일주일뿐이었다.

사실 테러방지법은 통과되기 전에도 2001년(국정원 발의)과 2003년(열린우리당 발의) 두 번이나 발의됐었는데, 두 번 모두 민주당 정부 때였다.

국정원,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은 주로 친북 사상/조직이나 혁명적 반자본주의 사상/조직을 표적 삼아 마녀사냥한다. 그렇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전체 대중을 향해 누구든 자칫 잘못 보이면 탄압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킨다.

따라서 국정원,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그런 기관과 악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직무 범위나 몇몇 조항만 조금 뜯어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옮기고,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경찰을 비대화하는 일 따위가 아무런 개혁이 못됨은 물론이다.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폐지는커녕 낙태권 운동가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이지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려 한다. 최근 경찰은 9월과 10월에 청와대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이 ‘미신고 집회’라며 모낙페 공동집행위원장단 2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한 법안을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더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기자회견 참가자까지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치졸한 시도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여성 인권’ 운운하더니 또다시 지독한 위선을 보여

준 것이다.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는 등 여성을 위한 척 수사를 늘어났다.

12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사진)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



원보이강자

동행동(모낙페)과 연대 단체들이 주최했고, 여러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이날]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 진행된 낙태죄 찬성 기자회견은 문제 삼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무관”하느냐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여성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재갈을 물리려 해도 항의 목소리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낙태죄 폐지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와 문재인 정부의 위기

김문성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하다. 권력형 부패 의혹에 직면한 정권이 치부를 감추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레임덕을 앞당긴 꼴이 됐다.

지난해 검찰의 집권층 수사를 막으려고 시작된 청와대-검찰 갈등이 급기야 검찰총장 징계 해임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벌인 윤석열 제거 시도의 명분과 절차가 너무 조잡해 국가기관들 안에서도 협조를 얻지 못했다.

12월 1일 법원, 법무부, 검찰 등이 모두 등을 돌렸다. 우스갯소리로 공수처가 생기면 첫 수사 대상이 추미애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권한 남용·권력 농단의 문재인 정부 버전인 셈이다. 그래서 언론도 비우호적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이다. 왜 정권이 윤석열을 찍어내는지 사람들이 알아채고 있다는 뜻이자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침묵도 위선과 비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검찰총장이라는 요직의 권력자를 쳐내면서 대통령이 장관 뒤에서 웅얼거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 비아냥이 나온다.

결국 추미애는 12월 1일 오전 국무총리 정세균과 문재인을 연달아 만났다. 아마 대책 회의를 했을 텐데, 1일 저녁에 나온 소식은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를 이를 뒤로 미룬다는 것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정권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계속 커져서 개혁을 위한 조치라는 말이 먹히지 않는다. 결국 기세등등하게 윤석열 징계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 겨우 일주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들이 모여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군색한 처지임을 드러냈다.

아수라장

12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논리를 대거 수용해 추미애의 직무정지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되면 '사실상 해임'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켜야 하고, 장관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해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 해임 시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같은 날 법무부 검찰위원회는 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추미애가 임명한 외부 출신 위원들조차 추미애에 반기를 든 것이다. 추미애는 11월 초 비밀리에 규정을 바꿔 현 검찰위원회 권한(감찰 착수 전에 감찰위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을 없앴다. 그때는 이미 추미애 지시로 윤석열 감찰이 시작된 후였다. 결국 윤석열 감찰 자체가 규정 위반인 셈이다.

법무부와 검찰 안에선 추미애가 임



문재인 정부는 징계를 위해 여당 측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서둘러 임명했다

명한 인사들이 반기의 선봉에 섰다. 결정타는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직무대행인 조남권이 엄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조남권은 1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게 대검 감찰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감찰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정책관실 검사 전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의장을 맡아야 할 법무부 차관이 사퇴를 했다. 그도 검사 출신이다. 추미애가 문재인을 만난 이유 중에는 이 공석을 서둘러 채워야 하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안에서도 간부 검사와 평검사들 모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운 불신임 의견이 팽배하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보여 주는 것은 핵심 국가기관이자 행정부 소속인 검찰 전체가 청와대에게서 사실상 이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명하복에 가장 익숙한 집단인데도 말이다. 이 점이 지난해 조국 사태와 달라진 점이다. 지난해에는 검찰 안에서도 특수부를 중심으로 요직을 차지한 윤석열 라인을 지지하지 않는 검사들도 꽤 있었다. 그래서 올해 추미애가 인사권으로 윤석열 라인을 쳐낼 수 있었다.

이런 아수라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다. 지난해보다 정권에서 이반한 층이 더 커진 것이다. 검찰, 언론, 중도와 심지어 진보 성향에서 지지층이 이반하고 있다. 윤석열의 인기가 올라간 것은 집권당의 감찰 개혁 사기극의 실체를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다.

2일 친민주당 언론들을 포함해 주요 일간지 사설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윤석열 해임 시도를 옹호한 언론이 단 하나도 없었다. 징계 시도를 옹호해 온 〈한겨레〉조차 이렇게 썼다. “윤 총장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인해

‘총장 찍어내기’로 비치는 상황 … 겸허한 자성과 책임 있는 설명 … 징계위를 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불편부당한 자세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과 신뢰의 기반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레이덕 시작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통제하지도 잘라내지도 못하는 대통령 문재인 의 처지를 보면, 레임덕이 시작되는 듯하다.

추미애와 문재인이 12월 1일 청와대 회동에서 동반사퇴를 논의한 듯하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사실 동반사퇴하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정권에게 출구 전략이 되려면 윤석열이 추미애보다 먼저 사퇴(징계 해임이든 자진 사퇴이든)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럴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그럴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효력 정지 판결이 난 1일 늦은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후임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입맛에 맞는 인물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런 상황 자체가 검찰 개혁(위선적이기 짝이 없는)의 좌절로 보일 것이다. 정권의 힘이 빠지고 내년 상반기 재보선을 앞두고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우파와 적폐 세력의 공작이나 반격 때문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점이다. 윤석열이 잠시 숨을 돌린 것은 (친문 일각의 과장처럼) 그의 권력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세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자충수로 지금 약화돼 있어서다. 즉, 윤석열 찍어내기가 역풍을 부르는 것은 개혁 배신과 위선 때문에 지지층이 이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서 개혁 배신을 계속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 자기 편으로 붙들어 놓으려 할 것이다. 노동부장관이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탄력근로제 개악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도의 천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개혁’의 반동적 성격을 감추려고 국정원법 개정이 개혁 입법이라는 등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좌파가 청-검 갈등에서 검찰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부패한 집권 핵심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비판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노동계약에 맞서자면서도 부패에 대한 비판을 아끼거나 회피하는 것은 일관성 결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진보(중도좌파)와 좌파 일각이 청와대-검찰 갈등에서 누구 편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을 회피하는 것은 그림의 절반만 보는 것이고, 상황의 정치적 맥락을 완전히 놓치는 것이다. 이 갈등의 본질은 윤석열 감찰이 집권 세력의 권력형 부패 혐의를 수사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현 정부의 핵심부가 온갖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는 일련의 개혁 배신의 일부였다. 그렇다고 노동운동이 부패한 억압 기관인 검찰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기

진보·좌파가 쟁점을 회피하지 않는 길은 지금 노동계약의 주체이자 부패를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실망한 대중을 대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우파에게 실날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으로 결별하

지 않고도 노동계약에 효과적으로 맞서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노동계약에 반대한다면 조노법 개악만 강조하고 탄력근로제 개악은 그다지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저항의 동력(노동계급의 기층)을 가동시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권이 가장 약점으로 여기는 부패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국가기관 내의 분열을 이용해 투쟁을 전진시키려 해야 한다.**

정의당은 청와대-검찰 갈등은 소모적인 권력 투쟁이라며 중대재해기업 처벌특별법, 낙태죄 유지 형법 폐기, 공수처 신속 설립 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낙태죄 유지 형법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에서 만든 안인데도 추미애 비판이 없고, 중대재해법을 회피하는 문재인 비판도 없다. 부패와 검찰 쟁점 회피가 단순한 오판이 아님을 보여 준다. 진보당도 말은 아끼며 문재인 정부의 부패 의혹에 말을 삼가는 것은 똑같다.

틈만 나면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라며 그것을 자신들의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건설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던 일부 좌파들도 부패와 청와대-검찰 갈등 문제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으로 진정한 쟁점에서 도망간다. 정권에 대한 정면 비판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의 불만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다. 좌파가 노동운동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결별하는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과제를 회피한다면, 바로 이것이 혁명적 좌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11월 30일 서울시내 선별진료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세계가 달라졌다'지만 노동자들은 임금도 노동조건도 그대로인 채 혹사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방역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해 온 'K방역'

창호중

코로나19가 인간에게 전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6400만 명이 감염되고 150만 명 가까이 사망했지만 이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만 매 시간마다 51명꼴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의료 붕괴'가 벌어진 다른 선진국들과 신흥국에서도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백신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며 조만간 팬데믹이 진정될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현재 개발 '성공'을 알린 백신들은 그 안전성과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도 완료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백신의 생산과 유통, 분배가 탐욕스러운 거대 제약기업들에 맡겨져 있다. 필요한 곳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만 보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관련기사)

한편, 백신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각국 정부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방역 조치를 미르는 핑계가 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가장 피해가 큰 나라들에서조차 정부가 방역과 의료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있다. 코로나 백신과 달리 방역과 병원에 대한 투자는 이윤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장차 그 투자를 줄

이거나 회수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 팬데믹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런 투자야말로 인류를 지킬 필수적 수단인데도 말이다.

한국의 'K방역'도 예외는 아니다. 11월 26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등은 경기도 역학조사관 2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면담 결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역학조사관들이 심각한 '번-아웃'(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는 아홉 달 동안 쉴 새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던 역학조사관들은 육체적으로 크게 지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접촉자들을 조사해 격리 '명령'을 내려야 했던 역학조사관들은 "괜히 풀어줬나... [혹은] 나 때문에 저 사람 생계를 막은 건 아닐까" 하는 심리적 갈등에도 시달려 왔다. 조사자의 대부분이 '감정 고갈과 냉소, 우울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새벽 4시에 퇴근해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일상이 이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한겨레〉 11월 16일 치).

고통스러운 일상이 끝날 기미도 없다. 그러기는커녕 확산이 잦아들 만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정부의 경기 부

양 조치 때문에 유행은 반복되고 그때마다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시시포스의 노동처럼 정상에 오를 때마다 다시 원점에 놓일 게 뻔하니 "냉소"와 "효능 감 저하"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유명순 교수 등은 6월과 8월에도 의료·방역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말은 임무를 지속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83.4퍼센트, 76.8퍼센트로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시민건강연구소는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11월 10일 연구보고서(보건 의료노동자, K-방역을 말하다)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겪은 고통스런 경험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냉소와 우울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졌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며 이들을 K방역의 '영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그 대우는 형편없었다.

당시 간호사들이 콧등과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일해야 했던 것은 단순

히 보호장구를 반복해서 착용해야 했던 탓만은 아니었다. 보호장구가 부족해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세척해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과의 접촉면이 변형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보호구를 착용하면 최대한 오래 일해야 했으므로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정작 병원 경영자들은 감염을 차단하는 무균술의 원칙들을 황당할 정도로 무시해 이런 고생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감염을 막기 위한 전신 보호복을 갈아입는 장소가 밀폐는커녕 다른 업무 공간과 분리되지 않고, 수시로 추가 인력이 드나들었으니 노동자들은 '도대체 왜 이 삽질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했다. 쓸모없는 삽질처럼 사람들 지치게 하는 일도 없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유행이므로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방역 당국의 오만한 태도(예컨대 초기에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 부인한 것 등)와 관료적이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병원 경영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한 경우도 많았다.

그 부담은 모조리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행 불가능한 의무를 부

과하고 나 몰라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감염 위험이 가장 큰 노동자들이지만 정기적인 검사도, 숙소도, 위생 시설도 제공되지 않았다.

턱없이 낮은 임금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정부는 대구에서 위기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전국의 의료진에 방역과 치료 동참을 호소했는데, 이에 호소해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30만~50만 원가량 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일해 왔고, 따라서 가장 유능했을 노동자들에게는 기존 월급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달 뒤 수백만 원씩 임금이 차이난다는 것을 알게 된 노동자들은 커다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협업을 저해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청소와 환자 이송 등 필수적인 업무가 외주업체에 고용된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떠맡겨져 있던 상황도 위험을 가중시켰다. 제대로 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감염을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병원 측은 이들에게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들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민간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 제공을 기피했고,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도 인력을 총원하지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않아 노동강도를 한층 높였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시장 논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방역과 의료 대응 수준을 유지하려면 방역과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

검사실과 각종 시설 관리, 환자 이송 노동자들도 평상시에 환자를 대면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유급 교육과 훈련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시간과 활동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 노동자들에게 전신보호구를 입고 벗어 가며 그동안 하던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노동자들이 못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해당 업무가 떠맡겨지거나 아예 안 하게 된다.

전쟁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노동자들을 방역 기관과 병원에 고용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병원을 전국 곳곳에 훨씬 큰 규모로 세우고 지역의 거점 병원들을 정부가 인수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중환자실 인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기관을 신설·운영해야 한다.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당장’에 숙련된 인력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1년 내내 투자를

미뤄 오고서 이제 와 할 소리는 못된다. 평상시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자원’을 호소해 봐야 효과를 볼 리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한참 더 갈 텐데도 정부는 백신만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방역과 의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이런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단 한 개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도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정부의 방역 기준은 갈수록 들쭉날쭉해지고, 스스로 그 기준을 어기기 일쑤가 돼 가고 있다.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면 생계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재난지원금’ 규모는 계속 줄어든다. 돈이 없다고? 재정건전성이 문제라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가며 1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권력이 할 말은 아니다.”(《경향신문》김민아 선임기자)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많은 나라 정부들이 이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며 국민적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역사상 많은 전쟁에서 지배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노동계급을 희생시켜 왔다. 그래서 전쟁은 마침내 자국 지배자들을 향한 노동계급의 항의와 저항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전쟁’은 어떨까? 세계 노동계급은 이미 곳곳에서 그 조짐을 보여 주고 있다.

정선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예산안은 여러 논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예산안을 조정해 처리했다.

우파 언론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최종 예산을 2조 원 늘렸으며 빚잔치 초수퍼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예산 558조 원은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555조 원)해서 보면 겨우 3조 원 증액된 것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0.5퍼센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물가 인상을 예도 미치지 못한다. 우파 언론들이 호들갑스런 말과는 달리 예산은 대폭 증액된 것이 아니라 올해 수준을 겨우 유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제한된 돈으로 노동자·서민보다는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데에 명백한 우선순위를 뒤서 예산을 짰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전체 12대 분야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2020년보다 22.9퍼센트나 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가 강조한 것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자원순환, 환경경제, 과학기술 등과 관련한 기업 지원 예산은 40퍼센트 넘게 늘었다. 이런 지원들을 통해 첨단 기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들이 주된 혜택을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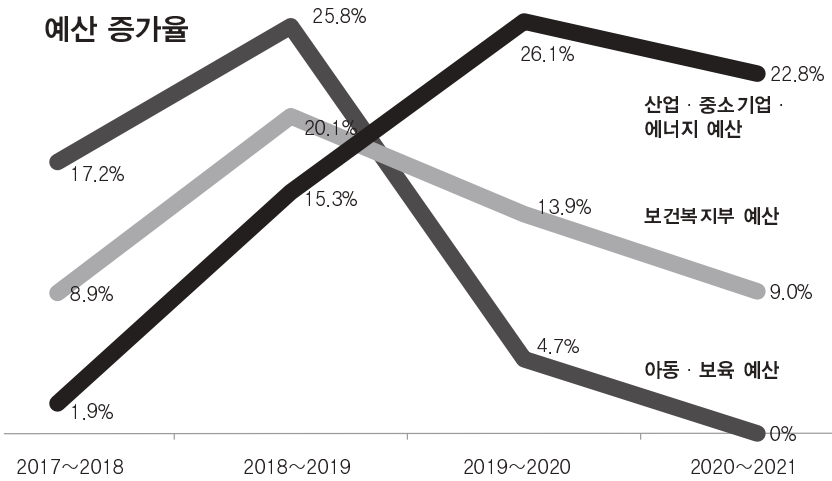
그린뉴딜이라고 표방하는 것과는 판판으로, 화석연료 시추 사업 예산은 3.5배나 증액했고, 국내외 유전 개발 사업도 지원한다.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공항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고용, 복지, 방역 예산

반면 고용, 복지, 교육, 보육 예산과 무엇보다 방역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 예산은 오히려 2.2퍼센트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안전한 교육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되레 허리띠를 졸라매게 생긴 것이다.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필요성도 커졌지만 보육 예산은 삭감됐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6퍼센트나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10.7퍼센트가 늘었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의 자연 증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11.1퍼센트로 OECD 평균 20.1퍼센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 예산



문재인 정부 초반에 비해 기업 지원 예산의 증가는 커졌고 복지예산의 증가는 줄어들고 있다

증가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게다가 2020년 추경으로 증액됐던 것까지 고려하면 노동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배정된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7.7퍼센트 줄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무려 32.9퍼센트나 줄었다. 예술인 3만 5000명과 특수고용 노동자 43만 명에게 고용보험 지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제까지 지원해 오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 그야말로 밑줄 빼서 읽을 꼴을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병상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내년 예산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대신 원격의료와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투자 확대 등 의료 상업화에는 수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의료 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행태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은 6월과 8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불과 10명 안팎일 때 병상이 포화됐다. 진주 의료원이 폐쇄된 서부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은 타 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후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78퍼센트의 환자를 감당하며 버텼지만, 3월 초 2300명이 집에서 대기했고 3월 중순까지 23퍼센트가 입원도 못 하고 사망했다. 수도권에서도 8월 중순 하루 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이 포화돼 자택 대기환자가 발생했다.”(11월 3일,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우익 언론 등은 턱없이 부족한 복지 예산조차 문제 삼으며 재정 적자가 늘어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자들이 법인세 감면은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연 소득 10억 원 초과인 경우 42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인상했지만,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 감면도 대규모로 진행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는 매년 7퍼센트씩 늘어 53조 원에 이른 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생명·고용·복지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이번 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불황 상황에서 이들이 기업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이들이 노동계약을 신속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

대폭 줄어든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작 3조 원만 배정됐다. 1차 14조 3000억 원, 2차 7조 8000억 원에 견주면 반의 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정의당은 21조 원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했다. 진보당은 국방예산 5조 5000억 원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외

면당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대다수 노동자와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됐는데 이번에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배제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길어지는 불황 속에 사람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이메일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사유리의 비혼 출산 지지 여론

결혼·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 변화를 보여 주다

정진희

11월 16일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유리를 응원했다.

이런 반응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의 의식 변화를 보여 준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9.7퍼센트였다. 2019년 국내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인구 1000명 당 결혼 건수)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비혼 출산에 우호적인 태도도 늘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22.4퍼센트에서 2020년 30.7퍼센트로 늘었다.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다수 여성들이 비혼 출산을 선택하기는 힘들다. 편견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양육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은 형편없다. 여성 다수는 자신의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정상 가족?

한국은 혼외 출산율이 OECD에서 가장 낮다. 2018년 2.2퍼센트로 OECD 평균 40.7퍼센트와 큰 격차가 있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정상 가족’ 개념에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의 법률과 제도는 ‘혼인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취급한다. 임신·출산·양육 지원책뿐 아

양육과 돌봄이 대부분 개별 가정에 맡겨진 상황에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양육과 돌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 의료, 연금, 보험, 상속제도, 청약 등 국가의 많은 정책이 그런 가족 모델에 따라 설계돼 있다.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없는 동거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나 세금감면 혜택은 물론,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

서구 나라들에 비해 한국이 뒤늦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이 더는 지배적 형태가 아닌 지는 제법 됐다. OECD는 핵가족 형태가 2045년 한국에서 전체 가족의 16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까지 전망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해 비혼모,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



사회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산 소식을 알리는 사유리의 SNS 게시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했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에 우호적 반응이 크자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한다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이 입발림을 넘어설지는 의심스럽다.

여가부가 이미 2018년 12월에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껏 추진되지 못했다. 그 내용은 ‘가족의 정의’에 사

실혼을 추가해 비혼 동거 가정을 가족 범위에 포함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가부의 개정 계획에 동성결혼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동성에 우파들은 이조차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본법 개정을 열의 있게 추진하지 않았다.

동거 커플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혜택을 주는 입법이 해외의 여러 나라들에 도입돼 있다. 이런 제도 도입이나 동성결혼 인정은 진보적이다.

그러나 양육과 돌봄이 대부분 개별 가정에 맡겨진 상황에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입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양육과 돌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들의 성적 관계들이 모두 결혼이라는 틀에 맞춰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혼’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지배자들은 끊임없이 결혼과 출산을 강요한다. 혼인을 하라와 출산을 저하는 사회의 ‘위기로’ 취급된다. 최근 한국의 지배자들이 비혼 출산에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출산율 때문이다. 여성들의 자유를 확대하려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여성의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지배자들의 권력에 집단적으로 맞서야 한다.

▶ 7면으로 이어짐

법무부의 교도소 내 성소수자 처우 방안, 문재인 정부의 실체 또 드러남

성지현

11월 20일 법무부의 구금 시설 내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이하 ‘방안’)이 공개되면서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문제와 법무부의 저급한 인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그 해 7월에 작성한 것이다. 법무부가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다.

공개된 법무부의 방안을 보면, 2019년 7월 기준 교도소에 수감된 성소수자는 53명이다. 성소수자 수감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성소수자 수용자들은 더 많을 것이다.

한국의 교도소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정원 초과라 수용자

5~8명이 좁은 방에 모여 ‘칼잠’을 자야 한다. 1인당 수용면적은 0.5~0.8평에 불과해 유엔이 정한 최저 기준에도 못 미친다. 교도관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리 없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천대에 시달리는 성소수자 수용자들의 처우는 더 끔찍하다. 애초 법무부가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가 한 사례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람은 트랜스 남성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남성이며 유방 절제술과 자궁적출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신체 검사 과정에서 “여자 생식기가 보이게 벌려 보라”, “남자아이의 성기가 보

인다. 발기를 하나?” 하는 모욕적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차별이 인정되진 않았다.) 아무런 상담이나 설명 없이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고 수차례 호르몬 투약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또, 맞지도 않는 여성 속옷을 계속 지급받았다.

법무부의 방안은 이 사례와 관련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방안에는 자비 부담의 호르몬 투여 허용과 같이 일부 개선책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더 많다. 우선, 이 방안은 성기 수술을 한 경우에만 트랜스젠더로 본다. 그래서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으로 처우(처우 기본 원칙)”하도록 했다.

이는 매우 편협하고 보수적인 관점

으로, 여러 이유로 성기 수술을 하지 못한(않은) 많은 트랜스젠더들을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한다. 트랜스젠더를 생물학적 성으로 대우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자신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예컨대 2005년 한 교도소는 트랜스여성 수용자가 요구한 호르몬 치료와 여성 속옷 영치·차입을 불허했다.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교도소 근무자에게 빌린 가위로 성기를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트랜스 여성이 남성 교도소에서 맞아 죽는 일들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그래서 일부 서구 나라들에서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원하는 성별에 적합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의복, 화장, 외관, 시설 배치 등).

게다가 법무부의 방안은 성기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여장 남자’나 ‘남장 여자’ 혹은 영어권에서 트랜스젠더를 경멸하는 단어인 쉬메일(Shemale), 히피페일(Hefemale)으로 지칭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보여 준다.

“이중 징벌”

둘째, 이 방안은 성소수자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하고, 운동, 집견, 이발, 의료 등 모든 생활에서 ‘단독 동행’하도록 했다. 즉, 성소수자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격리되고 모든 사회적 활동에서 차단된다. 이는 ‘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 생활을 하

홍콩 항쟁 청년 3인방 실행 선고 사이비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실체

12월 2일 20대 청년 3인이 지난해 홍콩 항쟁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7개월~13.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진행 중인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실제 복역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 억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년 3인(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은 옛 데모시스토당의 지도부다. 데모시스토당은 2012년 중국 정부의 “애국” 교육 강화 지침 반대 운동,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파기 항의 운동(“우산 운동”)에서 두각을 보인 청년들이 만든 정당으로, 2019년 송환법 반대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들은 올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 실시를 앞두고 데모시스토당을 해산했지만 당국의 탄압을 피하지 못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실행 선고로 정치적 항의 운동을 엄벌하겠다는 본보기를 보이려 한다. 이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 앞서 중국공산당의 유관 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홍콩 판사들이 시위대에 너무 관대하게 판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홍콩에서 정치적 자유는 계속 억압돼 왔다. 11월 12일에는 시진핑 정부의 지원을 받은 홍콩 캐리 램 정부가 직권으로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11월 25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램은 친정부 의원들만 남은 홍콩 의회(입법회)에서 연설하며 조만간 모든 공무원들에게 법 준수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언제든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램은 지난해 홍콩 항쟁이 “외세 개입” 탓이라는 거짓말을 또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 항쟁은 정치적 자유를 옥죄는 정책이 계속 추가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 운동이었다. 또한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다. (관련 기사 본지 305호 ‘홍콩 항쟁

의 배경과 역사)

한편, 7월부터 실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억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한 음식배달 노동자는 “홍콩 독립”을 여러 번 외친 것만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며 구속됐고 보석도 거부됐다. 한 마스크 생산 업체는 마스크에 “홍콩 잘하자, 우리 시대의 바이러스에 맞서자”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것이 문제가 돼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문구의 발음이 “광복홍콩, 시대혁명”(시위대가 자주 외친 구호)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 등을 이처럼 억압하는 것은 중국이 사회주의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자력해방”을 사회주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는데, 중국의 이런 억압은 바로 그 자력해방의 잠재력을 짓밟으려는 것이다.

한편,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중국 정부를 비난하며 이런 억압을 외교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 특히 미국은 ‘홍콩인권민주법’까지 통과시키며 앞장서고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에 당선한 조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홍콩을 중국과의 제국주의 경쟁에서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일 뿐이다. 10월 말 10~20대 활동가들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러 갔다가 쫓겨나고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일은, 미국을 믿었다가는 뒤통수 맞기 심상임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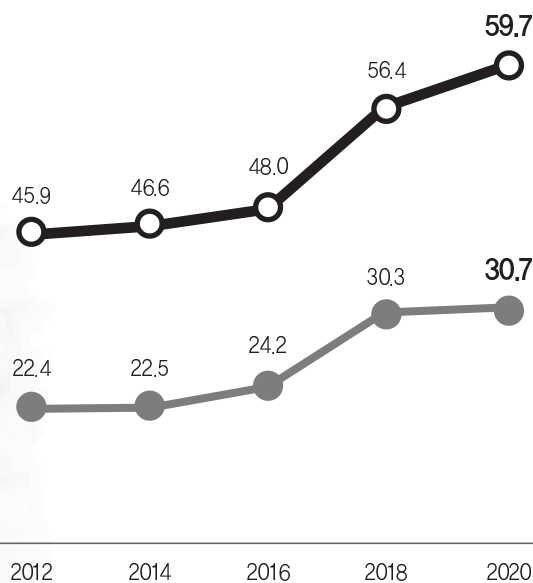
게다가 서방 열강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처럼 민주주의나 정치적 자유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들과 협력을 더한층 강화하려 한다. 그런 국가들에 기대는 것은 오히려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진정한 힘은, 홍콩 대중과 꼭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 억압과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데 있다.

김중환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견해가 바뀌고 있다 (단위: 퍼센트) | 자료 출처 통계청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6면에서 이어짐

사실상 불가능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

사유리가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명했듯이,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혼 여성이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출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혼 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17년 개정)은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

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법적 부부 외에는 시술해 주기를 꺼린다.

정부의 정책도 법적 부부에게만 비용을 지원한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 한정돼 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200만~300만 원가량 든다.

지침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1월 24일 지침을 개정해 보조생식술 적용 대상을 사실

혼 부부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비혼 여성에게는 적용을 확대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나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정책위원회 수준에서 12월에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중 의식의 변화, 난임 증가 등으로 보조생식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보조생식술 이용이 결혼 여부로 제한돼서는 안 되고, 모든 시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간허버린 권리 성소수자들이 교도소에서 안전하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고 휴업일과 야간에 독거 수용하는 것(처우상의 독거 수용)과는 다른 것으로 인권단체들은 이를 “이중 차별”이라고 비판해 왔다.

2019년 한 게이 수용자는 폐소공포증을 호소하며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거절했다. 심지어 자살 시도를 방지한다는 목적 하에 그는 CCTV가 설치된 더 좁은 1.2평 독방으로 옮겨졌다. 그는 당시 인권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렇게 썼다. “제가 지은 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대구 구치소 규정에 성소수자로 분류가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출소하는 날까지 독방에 수용되어야 한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올해 4월 법무부는 문제 많은 이 방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은 특히 모욕적인 단어를 수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핵심 문제점은 고수하는 듯하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차별을 받고 있고, 교도소는 특히 편견과 혐오가 심한 공간일 수 있다. 성소수자들이 교도소에서 안전하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교도소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수용자들의 처우가 나아져야 한다. 더불어 교도소 측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트랜스젠더 수용자인 경우 그가 원하는 성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즉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방안은 개선은 미미하고 오히려 문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홍콩 항쟁에 대한 보복성 탄압 정치적 자유조차 존중 않는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타이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타이 정치 위기의 원인과 기로에 선 민주주의 투쟁

자일스 자이 웡파콘

자일스 자이 웡파콘은 타이의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유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타이에서는 보수적인 군사 정권이 탄압과 부패한 정치 체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 정부는 올해 젊은 활동가들이 이끄는 민주주의 운동의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타이 시위대는 이제 홍콩 · 칠레 · 나이지리아 · 레바논 · 벨라루스 ·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불의와 권위주의에 맞서 일어난 새로운 반란 물결에 합류했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민주화 시위가 올해 8월부터 타이 군사 정권을 뒤흔들고 왕정까지 비판하는 용기를 보여 줬다.

9월 19일은 2006년 군부가 쿠데타

를 일으켜 선출된 정부를 엮고 집권한 날이다. 올해 이날 수도 방콕은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로 넘쳤다. 1970년대 반독재 대중 항쟁 47주년이 되는 10월 14일에도 그만큼 모여 독재자 프라윗 짠오차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부 청사로 행진했다. 시위대는 헌법을 새로 만들고 왕정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왕비의 차량이 시위대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자 시위대는 왕비를 향해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 (심지어는 가운데손가락만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위대는 왕비에게 “내 세금[좀]만 써라!” 하고 소리쳤다. 11월에도 시위대가 왕실 차량 행렬에 등을 돌리고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

타이 정부가 시위를 금지하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이 두 번의 시위에서 물대포를 쏘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쏘은 물대포를 쏘지만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시위를 확산시킬 뿐이었다.

기로에 선 운동

비무장 시위대를 학살하려고 군대를 투입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군사 정권의 대응은 아직 가벼운 편이다. 그렇다 해도 수많은 지도적 활동가들이 체포됐고 일부는 여러 재판을 받게 생겼다. 운동은 “우리 모두가 지도자”임을 선포하고 기층 활동가들이 계속 시위를 조직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총리 프라윗과 군부 깡패 집단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들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몇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려고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 헌법을 새로 만들고, 상원의원을 지명하고, 21개년 “국가 전략”을 선포하고, 2019년 총선을 부정 선거로 치렀다.

프라윗은 이미 손에 피를 묻혔다. 2010년 그가 군 총사령관이었을 때 그와 당시 군이 임명한 정부는 비무장한 ‘붉은 셔츠’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명령했다. 암살단을 보내 이웃 나라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타이 민주주의 운동은 기로에 있다. 시위를 계속해서 플래시몹 형태로 조직하다가는 참가자들을 지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운동이 승리하려면 정부를 통치 불능 상태에 빠뜨려야 하는데 이런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부가 정당들의 도움을 받아, 형편없는 타협을 운동에 강요하려 한다는 불길한 조짐도 있다.

이런 책략을 통해 정부는 의회 절차로 헌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치려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일부 중등학생들과 교육 여건에 관해 대화를 벌임으로써 시위대를 분열시키려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학생과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청년 활동가들이 이끄는 단체가 주로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초기에 이 청년들의 단체명은 “자유 민중”이었다. 현재 이들은 “대중당”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결성했다. 이는 절대 군주제를 타도한 1932년 혁명을 이끈 운동에서 따온 이름이다. 젊은 여성들이 이 운동에서 지도적인 구실을 한다.

운동 참가자들

최근 운동이 10년 전 민주화 운동인 ‘붉은 셔츠’ 운동과 다른 점은 어느 정당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주류 야당들은 운동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곧 모여드는 노점상들만도 못하다.

중고등학생들은 운동의 중요한 일부다. 이들은 수업 전 의무적으로 하는 국가 계양식에서 세손가락 경례 시위를 벌여 왔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시에 불복하고 언쟁을 벌인다. 가장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는 쪽도 주로 어린 여학생들이다.

지난 8월에는 학생 수백 명이 교실을 박차고 나와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그는 결국 학생들에게 “독재의 하수인”이라는 야유를 들으며 쫓겨나듯이 돌아가야 했다.

세 손가락 경례는 영화 〈헝가리 게임〉에서 따온 것으로 2014년 반(反)쿠데타 시위 이래로 군부 독재 반대의 상징이 됐다. 타이의 시위에는 항상 상징이 많



사진 출처: Protonews(폴리커)

시위에 나선 태국 청년들은 용기 있게 군사 정부에 도전하며 왕정까지 비판하고 있다

다. 10년 전 대규모 민주화 시위들의 조직자들은 ‘붉은 셔츠’로 알려져 있다. 반면, 왕당파는 노란 셔츠를 입었다.

이 반동적인 중간계급 세력은 나중 에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으면서 비당파적으로 비치려고 노력했다. 민주화 시위대는 즉각 이들에게 “사림”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사림은 여러가지 색으로 된 면 요리다.) 이제 민주주의 운동 내에서 “사림”은 보수적인 적들을 가리키는 경멸적인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새로운 세대

학생들은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산발적이었던 민주주의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위를 확대하는 데에 성공했다. 군부가 지배하는 의회 기구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헛수고임을 이 새로운 세대가 봐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타이 사회, 특히 교육 시스템에 단단히 뿌리내린 보수성에 신물이 났다.

국가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엉망이 됐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힘들다. 청년들은 장년층 다수가 느끼는 분노와 절망을 공유한다. 2019년 총선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군부 정당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군부의 잔혹한 탄압을 겪은 나이 든 활

2014년 당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을 붙잡은 군인들

동가들 사이에 만연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운동들과의 공통점이다. 모든 대중 시위가 그러하듯이 운동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들과 낙태권 활동가들이 운동에 합류했고 빠따니주(州) 말레이족 무슬림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활동가들도 함께했다. 앞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붉은 셔츠’ 활동가들도 2010년 운동이 흑독하게 탄압받은 이

후 처음으로 저항에 동참했다.

새 세대 운동이 뚜렷한 조직 구조가 없는 분권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은 이 운동의 강점이자 약점이다. 그 덕분에 핵심 활동가들이 주기적으로 체포돼도 시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선출되지 않는 핵심 활동가 집단이 더 광범한 운동 내에서 책임 있는 논쟁을 할 기회를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알아서 운동의 전략을 결정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타이 정치 위기의 근원

현 위기의 뿌리는 2006년 쿠데타로 이어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쿠데타는 [2001년 총리로 선출된] 사업가 출신 정치인인 탁신의 정부를 타도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배계급 내에서 벌어지는 탁신과 왕당파의 갈등을 “현대 자본가계급” 대 “옛 봉건 질서”의 대결로 설명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

탁신과 보수적인 반(反)탁신파 모두 왕정을 지지한다. 보수 세력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봉건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군주제를 지지함으로써 타이에서 가장 큰 자본주의 기업의 하나를 지지한다.

현재 군사 정권은 보수파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이다. 그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부도 쌓았다. 또한 타이 군부는 거대 은행과 다양한 언론 매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업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

탁신은 정보통신 사업에서 시작해 부유한 자본가가 된 자로 타이 주요 이동통신 기업의 소유주가 됐다. 그러나 총리 재임 중 탁신은 풀뿌리 수준의 케인스주의와 전국 수준의 자유시장 정책을 혼합해 타이를 현대화하려 했다. 그는 이것을 “이중 경로” 정책이라고 했다. 2001년 집권 초기에 그는 타이 경제를 아시아 금융 위기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해서 모든 지배층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수파는 탁신의 포괄적인 현대화 정책으로 특권을 잃을 것이 두려워 점점 탁신에게서 등을 돌렸다. 탁신의 현대화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빈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들을 포함했다. 탁신이 이끈 타이랴타이당은 이런 정책들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탁신 정부는 타이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정책을 내놓았으며, 농촌 지역에 일자리 창출 기금을 설립했고 농민의 부채를 덜어주고자 했다.

탁신을 향한 대중의 강력한 지지는 보수파를 두렵게 했다. 보수파의 정치는 선거에서 탁신의 투표 기반에 밀렸고 결국 보수파는 2006년 군부 쿠데타에 의지해야 했다.

탁신 이후

탁신은 사회주의자가 전혀 아니었다. 또한 원칙 있는 민주주의자나 인권 운동가도 아니었다. 탁신의 목표는 국가와 대기업들이 인구 대다수를 경제 성장에 끌어들이 수 있는 현대화된 타이 사회였다. 탁신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영감을 얻었다. 2008년 이래 탁신은 영구적으로 강제 추방된 상태이고 대중 항쟁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

탁신이 기피하고 새로운 야당인 미래전진당이 대중 운동 건설을 거부한 결과 지도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보면 왜 지금 시위가 주류 정치 바깥에서 일어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프라웃 군사 정권에 맞서는 운동은 이제 탁신의 정치 조직에서 완전히 독립적이며 평등, 자유, 사회 정의를 열망한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타이 군부는 계속 권력을 잡아왔다. 2011~2014년에는 잠깐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이 집권했다. 2010년 붉은 셔츠 운동이 무자비하게 탄압받은 이후 실시된 2011년 자유 선거로 붉은 셔츠 운동의 지지를 받은 정부가 들어서고 잉락이 타이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다. 군부와 우익이 주도하는 사법부는 지속적으로 잉락 정부를 약화시켰고 잉락 정부는 결국 2014년 중간계급 ‘사람’의 지지를 받은 프라웃의 쿠데타로 전복됐다.

프라웃 집권 후 결국 2019년에 총선이 열렸지만 이 선거는 군부가 만든 반민주적 선거 규칙과 반동적 헌법 아래에서 진행됐다. 프라웃이 이끄는 친(親)군부 정당인 인민공권력당은 전체 득표의 4분의 1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들이 군부의 재집권을 지지하고 프라웃을 다시 총리 자리에 앉혔다. 군부의 시녀 사법부 역시 두 야당[미래전진당과 타이랴타이당의 후신인 타이랴사차트당]을 해산했다. 또한, 이른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도 군인과 경찰로 채워졌다.

왕정의 쇠락

타이 대중은 새 국왕 와치랄롱꼰의 행태에 진저리를 낸다. 와치랄롱꼰은 2016년 사망한 국왕 푸미폰의 아들이다. 포악하고 멍청한 군주를 향한 뿌리깊은 분노가 이제 공공연히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비판과 책임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법에 분노한다.

와치랄롱꼰은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에서 그의 아내들과 보낸다. 그는 해외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기까지 했다. 그 여성들이 받는 취급도 그의 인기 하락에 한몫 했다. 왕의 총애를 잃은 상대는 감옥 신세를 지곤 했다. 와치랄롱꼰은 모든 왕실 재산을 자기 개인에게 집중시켜 통제하려고 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왕정 개혁 요구는 왕정의 영향력과 특권이 축소돼야 한다는 대중의 광범한 정서를 반영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이라는 생각에 매력을 느낀다. 타이 대중이 가혹한 법률[왕실 모독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왕을 비판할 자신감을 얻은 것은 수십 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국왕 와치랄롱꼰(오른쪽 남성)

강력한 군부는 취약한 왕정을 앞세워 권위주의적 통치를 오랫동안 정당화해 왔다. 타이의 많은 활동가들은 절대 왕정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사실 왕정은 1932년 이래로 독자적인 권력이 없었다. 왕정은 군부와 우파의 도구 구실을 기꺼이 해 왔다.

대중의 왕정 비판은 반가운 일이며 군사 정권을 약화시키고 타이가 공화국이 되는 날(이는 오랜 숙원이다)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군부 독재는 여전히 민주주의와 대중 권력의 주적으로 남을 것이다.

허울뿐인 왕정의 실체

1932년 타도된 절대 왕정은 자본주의적 왕정이었다. 이 왕정은 타이를 근대화하는 과정, 즉 1870년대 일본에서 봉건제를 끝낸 “위로부터의 혁명” 비슷한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 절대왕정이 흔들리자 1932년 혁명이 일어났고 타이 자본가 계급의 통제 속에서 입헌 군주제가 들어섰다.

수십 년 동안 타이 지배층은 보수적인 왕당파 네트워크를 통해 타이를 지배해 왔다. 이런 지배는 국왕에게 전능한 신과 같은 이미지를 덧씌웠다. (“네트워크 왕정”은 타이 역사와 정치를 연구한 영국 학자 덩컨 맥카고가 쓴 용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분석이 왕실의 힘을 과장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 국왕 푸미폰은 항상 취약했다. 그는 무능했고 그의 권력은 허구였다.

타이 지배층은 푸미폰의 황설수설하는 연설들을 마치 신성한 말씀인 양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푸미폰의 말은 지배계급 보수 세력들이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하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푸미폰의 아들 와치랄롱꼰도 종종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서 왕과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했던 외국 외교관들을 난처하게 했다.

타이 지배층 중 진정한 힘을 가진 자들은 군대, 고위 공무원, 재계 지도자들이다. TV에는 이들이 바닥에 엎드

려서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 그들은 왕정이라는 허울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부를 늘려 왔다. 이것은 대중을 속이려고 연출한 이데올로기적 연극일 뿐이다. 현대 사회에 남아 있는 모든 군주제는 기존 질서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구실을 한다. 타이도 이런 법칙에서 예외가 아니다.

타이는 냉전 동안 미국의 가까운 동맹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부터 타이는 미국과 점차 거리를 뒀 왔다. 오늘날 타이 정부는

그 지역의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애를 쓴다. 타이 군사 정권은 중국의 군사 장비를 자주 구입한다.

미국은 미국대로 타이 정부를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아 왔다. 오바마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타이의 연합 군사훈련은 타이 군사 정권 하에서 계속돼 왔다. 저항 운동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음모론은 근거가 없으며 평범한 사람들은 외부 개입 없이는 스스로를 조직할 수 없다는 모욕적인 가정에 기초를 둔 것이다.

전망과 과제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은 둘 중 하나다. 운동이 파업과 같은 더 강력하고 전투적인 행동을 조직하는 쪽으로 전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운동이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는 만큼, 운동에 더 강력한 힘을 부여할 파업을 건설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정치화한 방식으로 싸우길 원한다. 주로 민간 부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전투적인 활동가들은 군사 정권과 노란 셔츠에 반대한다. 최근 몇 달간 이들은 개인적으로든 노동조합원으로도든 새 세대가 이끄는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려고 나섰다.

자동차 조립 공장, 차량 부품 공장, 전기 기계 공장이 밀집한 동부 해안에서는 현장 조합원 조직인 ‘노동자 동부 연합’이 군사 정권에 맞선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방콕 바로 북쪽에 있는 사라부리시(市)에서도 섬유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런 전투적 노동자들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며 파

업에 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타이에는 자동차와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은행, 대학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있다. 운송 노동자와 병원 노동자도 있다. 군사 정권에 맞서는 파업을 건설하려면 젊은 활동가들은 전투적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고 작업장을 찾아가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방법을 토론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10년 전 패배한 붉은 셔츠 시위와 1970년대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바로 조직된 노동계급의 대열로 운동을 확대하는 것이 사활적이라는 것이다. 타이 좌파들은 1980년대 타이 공산주의 운동이 쇠락한 이래 정치적 존재감이 미약했다. 타이 좌파가 취약한 탓에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 세대 투사들이 필수적 과제를 수행하는 길로 한 걸음을 내딛길 바라 마지않는다.

번역 강미령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찰리 김버

11월 28일 프랑스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이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 발의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다. 약 50만 명이 참가했다는 추산도 있다.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이 있었음에도 시위 규모는 컸다. 파리·마르세유·포·렌·보르도·리옹·릴·낭트·스트라스부르를 비롯해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행진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인 반자본주의신당(NPA)은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의 정치적 정체 상태를 떨치고 거대하게 각성했다.

“학생, 대학생, 노동계급 거주 지역 청년들 등 젊은 사람들이 시위에 많이 참가했다.

“이들은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맞서, 더 일반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항쟁에 나섰다.”

파리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행진 대열을 공격했다. 시위대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경찰에 맞섰고 프랑스은행(중앙은행)과 BMW의 고급 자동차 전시장에 불을 질렀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보안법’ 법안은 “경찰의 물리적·정신적 안녕을 해치려는 의도로” 경찰을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하려 한다. 경찰이 노란 조끼 운동 참가자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르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징역 1년, 벌금 4만 5000유로(한화로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분노한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다. 11월 28일 파리에서 열린 보안법 반대 시위

약 6000만 원)로 처벌받게 된다.

반면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된 드론으로 시위와 행진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기자에게도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

정부는 ‘포괄적 보안법’과 동시에 다른 교육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대학 캠퍼스 내 시위, 특히 캠퍼스 진입로 봉쇄 및 점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최대 3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새 법안들에 반대해 21일에도 시위·행진이 있었다. 하지만 28일 시위 규모가 훨씬 컸다. 그 사이에 국가가 은폐하고자 하는 경찰 폭력을 적나

라하게 드러내는 두 사건이 새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나는 경찰이 흑인 음악가를 구타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폭로된 일이다. 11월 29일 현재 이 영상의 조회수는 2000만이 넘었다.

영상 속 피해자 미셸 제클레르는 21일 저녁에 작업하러 녹음실로 갔다. 당시 그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있었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빌미 삼아 경고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듯하고, 이후 20분 동안 제클레르를 폭행했다. 인종차별 반대 활동가 에두아르는 이렇게 전했다. “패리

고 또 패리는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이지 분노스럽습니다.”

경찰은 제클레르를 연거푸 견어쳤고, 주먹으로 약 20대를, 경찰봉으로 주로 얼굴과 머리를 열다섯 차례 가격했다.

미셸은 인터넷 매체 <뤽시더>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으로 ‘바닥에 쓰러지면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욕설

미셸은 경찰들이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부었다고도 했다.

경찰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 말리고 나서야 구타를 중단했다. 경찰은

떠나면서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최루탄을 던졌다.

이런 역겨운 행태가 있기 며칠 전에는, 경찰이 프랑스 레퓌블뤼크 광장에 있는 난민 텐트촌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전투경찰은 임시 천막에 사는 난민들을 두들겨 뺐고, 난민들이 달아나자 최루탄을 쏘며 추격했다.

현재 항의 운동은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동이 이 밖에도 많다고 강조한다.

6주 전에 경찰은 흑인 남성 올리비오 고프를 파리 교외에서 살해했다.

고프 살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에딜슨은 28일 파리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셸 제클레르 사건은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가난한]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졸골 그런 일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제클레르 [폭행] 영상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점은, 경찰 십여 명이 그런 구타 행위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자들이예요.”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영상에 찍힌 경찰 폭력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경찰편을 들리라는 것은 모두 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경찰을 동원해 노란 조끼 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 노동자 투쟁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제 마크롱은 경찰이 진정 보호하는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묻는 운동을 마주하고 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3호 / 번역 김중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팬데믹, 부채, 경제력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은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 우리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 가장 거대한 세계경제 침체 한복판에 있다. 오늘날 영국의 불황을 두고 지난 30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고들 한다.

역사적으로 이 충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이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경제 논설가 마틴 울프는 여기에 답하는

유용한 글을 썼다.

울프는 “코로나19가 사회와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그 수준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컸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사망자가 500만 명이라면 이는 세계 인구의 0.06퍼센트에 해당한다. 이를 1918~1919년의 소위 “스페인 독감”과 비교해 보라. 스페인 독감 사망자는 세계 인구의 2.4~6퍼센트에 달했다.

옛 전염병은 더 파괴적이었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로 천연두를 옮겼을 때에는 원주민 인구 93퍼센트가 사망했다.

경제적 비용

코로나19의 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 울프는 그 비용이 많으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75퍼센트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경제학자들이 스페인 독감에 비견할 만한 전염병 대유행의 경우로

추산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염병 대유행이 이토록 큰 경제적 손실을 낳은 이유는 무엇인가?” 울프는 이렇게 대답한다. “정답: 다음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상적 지출의 상당 부분을 쉽게 줄일 수 있고 그들의 정부는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기업들을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다. ... 대유행에 대한 대응은 오늘날의 경제적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적어도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그렇다. 대유행을 잡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를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

울프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부유한 나라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에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이 더 많다. 더 나아가 울프는 새경제사상연구소가 발표한 도표를 인용한다. 이 도표는 경제 살리기와 사람 목숨 구하기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전반적으로, 인명에 우선 순위를

둔 나라들은 경제 생산에서도 덜 손실을 봤다. 중국이 두드러지는 사례다.

그러나 단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달린 것은 아니다. 같은 도표를 보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나라들 중에는 이탈리아·영국·스페인·프랑스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 벨기에도 그 못지않다.

결국 부유한 북반구의 몇몇 정부들은 이윤을 우선했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하고 나라 경제를 망쳤다. 보리스 존슨 하의 영국이 특히 처참하게 실패했다.

한편, 가난한 나라들은 목숨이나 이윤이나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일 때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국민 소득의 약 20퍼센트만큼 정부 지출을 늘렸다. 반면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생산량의 2퍼센트만 큼밖에 늘리지 못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단지 절대적인 부나 빈곤의 문제가 아니다. [대유행 통제에 비교적 성공한] 쿠바나

베트남이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추가적인 정부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달됐다. 국제금융연구소는 연말에 세계 부채 규모는 27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세계 GDP의 36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수당 우파들이 앓는 소리를 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한테 이런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다. 자국 통화로 된 빚이고 초저금리로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엄청난 외채 더미 위에 얹은 가난한 나라들은 그럴 여지가 없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는 이미 6개 나라가 외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부채 재앙”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제대로 또는 잘못 대처하는지는 지배적인 경제력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3호 / 번역 이원웅

폴란드 낙태권 운동 경찰 폭력 물리치며 계속되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폴란드 '노동자 민주주의' 활동가

폴란드의 낙태권 투쟁이 새롭게 활기를 얻으며 계속되고 있다.

11월 28일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주말까지 60여 도시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낙태권 시위는 헌법재판소가 심각한 기형아의 낙태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후 10월 22일부터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집권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의 의지를 이행하려는 친정부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극도로 보수적인 '법과 정의당'(PiS)을 이끄는 폴란드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다.

이번 낙태권 시위는 법과정의당과 낙태 금지 판결에 대한 분노로 촉발됐다. 11월 28일 시위로 그 연장선에 있지만 11월 18일에 경찰 폭력이 기쁨을 끼얹은 탓도 있었다.

18일에 행진이 끝나자 사복 차림의 강패가 시위대를 공격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들이 예전에 여성 행진을 공격했던 파시스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었다. 그들은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강철 삼단봉을 꺼내 시위대를 공격했다. 그 중에는 테러대응반 요원들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좌파당 여성 의원도 최루탄 공격을 받았고, 하원 부의장인 좌파당 의원은 의회 밖에서 경찰에게 두들겨 맞았다. 11월 28일에는 또 다른 여성 의원이 최루 가스를 뒤집어썼다.

법과정의당 대표 카친스키는 자기 진영과 극우파로부터 동시에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는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 주려고 경찰을 압박해 시위대를 훨씬 더 가혹하게 대하게 했다.

정부가 대중 시위에 뜻밖으로 강경

하지 않게 반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폭력에 기대는 것 또한 분노를 자아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11월 28일에 일어난 일이다. 이 시위는 폴란드 여성 투표권 쟁취 102주년을 기념해 벌어졌다.

수도 바르샤바 도심에는 20세기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유대인 혐오 정치인 로만 드모프스키의 이름을 딴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 시위대는 표지판들을 덮어서 이 교차로 이름을 '여성 권리 교차로'로 바꿨다.

경찰은 거대한 시위대를 저지하려고 여러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 시위는 4시간 동안 이어졌다.

5주 넘게 지속된 여성들의 시위는 폴란드 정치 지형을 바꿨다.

11월 둘째 주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70퍼센트가 시위를 지지한다. 13퍼센트는 여성들의 시위에 참여했다.

적어도 수백만 명이 한 번이라도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24세 이하

나머지 57퍼센트는 시위를 지지하지만 아직 참가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18~24세의 29퍼센트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18세 미만도 시위에 많이 참가했다.

이 운동은 다른 더 중요한 성공도 거뒀다.

그들은 우파, 즉 법과정의당의 가톨릭 민족주의자들과 파시스트 모두에게 타격을 입혔다.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반대해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을 당시, 파시스트가 조직한 11월 11일 독립 기념일 행진의 규모는 10년 이래 가장 작았다.

법과정의당은 여론조사에서 간신히

“이곳 교차로의 이름은 ‘여성의 권리’입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11월 28일 시위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전 집권당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제1야당 ‘시민연단’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의 경향 연합 정당인 ‘좌파당’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상 가장 큰 정치적 수혜자는 여성 시위를 지지하는 유명 자유주의 가톨릭 TV 진행자가 이끄는 정당 ‘폴란드 2050’이다.

그는 아직 의회에 입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웃사이더로 여겨지고 있다. ‘폴란드 2050’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0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변화는 대규모 시위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

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은 두려움을 모르고, 젊고, 주로 여성들로 이뤄진 새 세대 시위 참가자들을 배출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창조했다. 그들은 주요 도로를 막고 경찰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 그들은 몇번이고 거듭해서 시위로 돌아온다.

시위는 반동적인 가톨릭 교회의 위계 질서를 더욱 약화시켰다.[폴란드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부터도 교회 출석률은 감소해 왔다.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 금지 판결이 효

력을 지니려면 총리가 11월 2일까지 판결을 공표했어야 했다. 그러나 총리는 아직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정부가 시위대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처음에는 더 많은 병원이 낙태 시술과 일부 산전 검진을 제공하길 꺼릴 것이라 예상됐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로 판결 공표가 지연되면서 일부 병원은 태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낙태 시술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일부 병원은 어중간한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낙태를 실시하되 그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지는 않는다.

한편,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이 상당한 것이 분명함에도 최대 노조들은 기껏해야 말로만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노동자들은 더 나아갈 것이다.

토요일 바르샤바 시위에서 트램 기관사 라팔은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 기관사들은 트램 전면 디스플레이에 이런 메시지를 띄웁니다. ‘우리도 여성들을 지지합니다.’”

보건 노동자들도 방역 마스크와 방제복을 입은 채 시위대를 상징하는 번개 기호를 내보이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위와 시위진압 경찰의 모습을 보며 사회에서 경찰이 하는 구실에 의문을 품고, 함께 싸울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깨닫고 있다. 이 운동의 주요 슬로건 하나는 “연대는 우리의 무기”다.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 혁명적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좋은 시기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73호 / 번역 최병현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 암살 임기 막판까지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

11월 27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과학자를 암살했다.

이 야만적 행위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내년 조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까지 이란과의 갈등을 더 깊게 하려고 벌인 일이다.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와 그의 경호원 3명은 테헤란 인근 고속도로에서 기관총 세례를 받고 살해됐다고 한다. 살인자들은 잡히지 않았고 이후 자동차가 폭발했다고 한다.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지도적인 핵과학자였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번 암

살에 만족감을 표하고 뽐내고 있다.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 유발 슈타이니츠는 이번 암살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지역과 세계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관료는 〈뉴욕 타임스〉에서 이번 암살을 두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 기사를 보면, 이 고위 관료는 수년 동안 파크리자데를 추적했다. 그는 또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막으려고 이스라엘이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살인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갈등을 더 키우겠다고 위협하는 와중에 벌어졌다. 트럼프는 지난주에 중동 기

지들에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적대 행위를 단념시키고 미국의 동반자와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마지막까지 애쓰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하에서 체결된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징벌적 경제 제재를 종료하기로 돼 있었다. 그 대가로 이란은 핵 개발 중지를 약속했다.

이 합의는 미국이 중동을 계속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바마는 미국과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인 이스라엘만이 이 지역의 유일한 핵무기 보

유국으로 남길 바랐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을 박살 내길 원했다. 갈수록 이란은 이 지역에서 미국 지배력에 도전자로 부상했다.

중동에서 군사력으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구실을 맡은 이스라엘의 지원 아래 트럼프는 이란에 도로 제재를 가했고 전쟁 위협을 가했다.

또한 트럼프는 아랍 국가 지배자들에게 이란에 맞서 이스라엘과 단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승인한 거짓 “평화 협상”을 아랍 국가들한테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은 과거 오바마의 방식대로

중동을 지배하길 바란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벌인 행동을 바이든이 모두 뒤집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안다.

바이든은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숭한 전쟁을 옹호하기도 한다.

트럼프는 몇 주 안 남은 임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전쟁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자칫하면 중동과 세계 도처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닉 클라크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33호 / 번역 김중환

부산 대리운전 노동자 파업

“코로나19 이후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양효영

부산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12월 1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로지연합(친구넷, 시민연합)의 업무를 5일간 거부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들은 업체가 떼 가는 중계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인하할 것, 표준요금제(기본요금 1만 3000원), 보험 단일화,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것, 기타 불공정 관행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은 무려 10년째 기본요금을 1만 원으로 동결했다.

그런데 업체들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서 떼 가는 ‘중계 수수료’는 인상됐다. 무려 30퍼센트나 된다.

그 외에도 업체들은 온갖 명목의 돈을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서 떼 간다. 소위 ‘출근비’(기사 셔틀버스)도 매일 3500원씩 걷는다. ‘콜’을 잡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료도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가한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여러 업체의 일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마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할수록 출근비, 보험료도 이중, 삼중으로 뜯긴다.

“기사 수입이 50퍼센트 이상 줄었는데 부대비용(보험료, 프로그램비, 출근비)은 그대로고요, 지금은 월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죠.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최근 조사를 했는데요,



점유율 경쟁에 할안이 된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

대리운전 기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박재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장)

게다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대거 대리기사 시장으로 몰려들자,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콜 가격을 낮춰 점유율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또 다른 불만 중 하나는

업체들이 콜 취소 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심사지침’(특고지침)은 이를 금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만연하다.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자가 아니고 특수고용직이라며 교섭을 거부한다.

“사측은 처음부터 저희들하고는 공

식적, 비공식적 어떤 대화도 못하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지 위확인소송을 걸어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순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엄연한 노동자다. 업체들은 기사들의 근무 태도부터 콜 수행까지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파업 2일차 현재(12월 2일) 기사들의 동참도 많다고 한다.

“부산은 수능 때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9시가 되면 모든 요식업은 문을 닫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8시 반부터 9시까지 콜이 폭주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 저희 기사들 출근율도 3분의 1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SNS 기업들의 가짜뉴스 단속 예고
우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안형우

페이스북코리아가 선거철 가짜뉴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한겨레〉 11월 11일치). 앞서 이번 미국 대선 때 페이스북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한 “표 도둑질 중단(#StopTheSteal)”이라는 해시태그를 차단했는데, 한국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때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트위터도 미국 대선 때처럼 선거 관련 게시물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나 전광훈 같은 극우가 퍼뜨리는 인종차별적·반과학적 가짜뉴스는 혐오스럽다. 이자들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할 이유는 없다. 표현의 자유는 피억압자들이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지 억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SNS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반길 수는 없다.

이중잣대

표현의 자유는 SNS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이들은 광고 판매 기업이고 그것도 거대한 독점 기업이다. 주류 질서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와 잘 지내려 한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정보국을 만나 선거 대응을 논의했다.

대선 직전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바이든에 관한 부패 의혹 보도 기사를 일시 차단함으로써 바이든을 간접 지원했다. 이후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의 전현직 인사들이 바이든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 면에서 권력자들과 피억압자들을 다르

게 대했다.

지난 5월 트럼프가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가 시작된다”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협박하는 글을 썼을 때 페이스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업무 거부까지 했다.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는 해당 글이 공권력 사용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폭력 선동이 아니며 따라서 제재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트위터는 같은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 “폭력 미화”라고 경고 메시지를 붙이고 숨김 처리했지만(이용자가 원하면 볼 수 있는 조치),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내내 인종차별주의적 주장을 쏟아내며 트위터의 규정을 밥먹듯 어겨도 결코 계정을 정지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엔 아예 공직자의 계정과 트윗이 운영원칙을 위배하더라도 삭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아마 트럼프가

이 규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봤을 것이다.

반면 지난해 트위터는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 조직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영문 계정과 팔레스타인의 주요 언론 〈쿼드 뉴스 네트워크〉의 계정을 정지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미국 정부 지정 테러 조직 연관 계정들을 정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이었다.

팔레스타인 저항 조직에 관련한 검열은 인터넷에 만연해 있다. 지난 9월 샌프란시스코 대학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소속 여성 무장 투사였던 레일라 칼리드의 온라인 강연을 계획했다. 그러나 화상 회의 기업인 줌은 강연을 불허했고, 페이스북은 이벤트 페이지를 삭제했다. 유튜브는 강연 시작 23분 만에 영상을 차단했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이 정부 지정 테러단체이며, 폭력 행위를 미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렇듯 SNS 기업들은 억압적 국가 기구에 기꺼이 협력하며, 국가의 법률과 태도를 중요한 검열 기준으로 삼는다.

부메랑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이런 규제는 좌파와 피억압자들에게도 부메랑이 될 것이다.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는 게 이들 기업의 기본적 동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논란을 피하려고 권력 비판이나 좌파적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다.

예컨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의 만행을 폭로해 폴리처상을 받은 ‘네이팜탄 소녀’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차단됐다. ‘아동 포르노’라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페이스북은 2016년 이를 감지한 언론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야 이 사진을 허용했다.

▶ 13면으로 이어짐

대학 온라인 강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한가?

김지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시행했다. 2학기에도 전체 대학 중 99.4퍼센트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교육부).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지만, 낮은 교육의 질은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제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가 대면 강의보다 더 일방적이라고 느끼기 쉽고, 교수자는 학생들이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집단적 토론과 상호작용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들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약화될 수 있다. 많은 강의들이 과제의 양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런 부족을 메우려고 하는데, 결국 학생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

가난한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 장비가 필요하고, 인터넷 연결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장비들은 꽤 고가여서 개인용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적잖다.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카페를 찾는 학생들도 꽤 있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학생 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대학의 취약계층 학생 정보화 지원 실적을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분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민간기부금을 이용해 기기를 제공하게끔 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수가 겨우 900명에 그쳤다. 그나마도 여러 조건을 따져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 방침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의 장애 대학생 수는 9300명이 넘는다(2019년 기준). 여러 대학의 장애인권 단체들은 여러 차례 장애 학생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수업 이해에 꼭 필요한 자막이 부실하고 전문 속기사 지원 등 여러 지원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 지원 방안을



5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서비스 부실에 항의하는 청년민중당 당원들

모든 대학에 안내했지만, 대학이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라 대학의 자율성에 사실상 맡겨 놓은 셈이다. 정부가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교강사들도 온라인 강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민교협은 “교강사 개개인에게 비대면 수업 준비와 강의 진행의 책임이 떠맡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재정과 인프라가 취약한 대학일수록 더 그러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학기가 바뀌고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학생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과제도 늘어난 만큼, 교강사들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늘리고 강의 내용과 자료를 온라인 강의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재정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지원돼야 한다.

지원에는 인색, 규제 완화에는 속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강의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이었다. 정부는 원활한 대학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

토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2학기는 더 나은 환경에서 수업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올해 내내 학생들은 여전히 비싼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요구하는 대학 당국들에 불만을 터뜨렸다. 수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데다가 코로나19에 경제 위기가 겹쳐 고통이 커졌으므로 이런 불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대학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다. 대학 당국들은 기존의 수입을 유지하려고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불만을 감지한 정부가 뒤늦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 간접 지원이고 규모도 너무 작다. 정부는 자구책을 내놓는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겠다고면서, 애초 내놓은 1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예산 규모를 줄였다. 일부 대학들은 10만 원 수준의 지원비를 “장학금”이라며 내놓고는 생색을 냈다.

대학 당국들은 온라인 강의가 부실한 것이 온라인 강의 비율을 전체 강의의 1퍼센트로 제한한 규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시급한 조처들에 꾸물거리던 교육부는 대학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는 신속히 호응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온라인 강의 공개 확대나 ‘원격 강의 장비 구축’ 등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 방안의 핵심은 원격 강의를 포함한 고등교육 규제 완화, 산학 협력강화 등에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면 이동은 장기적으로는 이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에는 이점도 있다. 강의실에서 직접 수업을 듣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강의가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강의를 공간 제약 없이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하려면 기반 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결국, 지원이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안전을 위해 비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는 온라인 수업 확대로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 아니다. 풍나물 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대형 강의에서 학생과 교강사가 충분히 토론하고 교육적 관계를 맺기란 쉽지 않다. 가난한 대학생들과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제껏 정부와 대학 당국들의 관심

사는 경쟁을 통한 이익 확대에 있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잘못된 우선순위 속에서 학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교직원, 강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돼 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에 견줘 38퍼센트(164억 4600만 원) 삭감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사립대학들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와 업무 부담 감소를 이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려 온 청소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이 심해져 더 많은 일을 떠맡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면서 좀 더 나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은 학생과 교강사, 노동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일은 대학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 대학 당국과 정부가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에 맞서 저항할 때 가능하다. 나아가 대학 교육을 압도적으로 사립재단들 손에 맡겨 놓은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2면에서 이어짐

페이스북은 <노동자 연대>가 지난해 6월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공식 홍보물을 유료 광고하려고 했을 때 불허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주제를 이용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이유였다. 본지가 항의하고 나서야 광고를 허용했다.

페이스북은 본지 장호종 기자가 공저한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을 출판사가 유료 광고하려

고 할 때도 “위기 상황 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이용하는 콘텐츠들 홍보”한다며 불허했다가 항의 후에야 허용했다.

명시적으로 차단하지 않더라도 노출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은밀한 검열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결국 SNS 기업들이 검열을 강화한다면, 폭력 미화 금지 같은 일전 객관적으로 보이는 규칙을 가지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이윤에 침해가 될 정

도로 논란이 되는 주제는 다 막는 식의 규제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가짜뉴스의 근원

무엇보다 SNS 기업의 규제가 가짜뉴스라는 문제적 현상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가짜뉴스는 체제 위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을 쪼먹는 장기화된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주류

정치 세력이 위기 해결에 완전히 실패한 것 등이 지배적 이데올로기 위기의 비옥한 토양이 됐다. 일부 사람들이 현실 질서에 대해 거의 완전한 불신을 갖게 됐다. 이런 토양 아래서 만연한 사회적 불신과 확증편향 등이 자라났다. 코로나 위기도 이를 부추겼을 것이다.

가짜뉴스는 이런 체제가 실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배양돼 횡행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진정한 대안이 제공될 때 가짜뉴스는 점차 힘을 잃을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가짜뉴스를 활용하는 우익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이 개혁 배신으로 박근혜 퇴진 촛불에 나섰던 사람들이 실망하면서였다.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박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진정한 대안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 취재 ‘인권 존중 기업’ 이케아의 위선적인 노동 통제

1인 다역 업무에 임금은 최저, 이뿐만이 아니다

글 양효영 사진 이미진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지사 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인 무기계약직이다. 이케아 사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연한 시간제 근무로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탄력근로제로 추가 수당도 없이 노동자들을 부려왔다.

노동자들은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차조차 2개월 전에 내야 할 정도(노동법 위반이다)로 자율성이 없었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극도로 불규칙한 근무 스케줄에 안정적인 일상은 꿈도 꾸기 어렵다. (이케아의 시간제 노동, 유연근무 실태에 관해서는 본지 345호 “사회 공헌 기업” 이케아의 이율배반, 노동자는 죽어 나가요”를 보시오.)

노동자들은 올해 2월부터 마트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를 만들고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유급 휴게시간 보장,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차례 교섭에도 진전이 없자, 11월 29일부터 전 조합원 태업에 들어갔다.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이 태업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한다. 그동안 이케아 노동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업무 강도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이케아 광명점을 찾아 노동자들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이케아 광명점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 곳은 전 세계 이케아 매장 중 세 번째로 크다. 제품 종류만 1만 개에 달하고, 매장 규모는 5만 9000제곱미터로 축구장의 8배 크기라고 한다.

그러나 넘쳐나는 물건과 방문객 사이에서 이케아 노동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커다란 전시 공간(쇼룸)에 이케아 노동자는 겨우 1~2명밖에 없었다. 이케아 사측이 적은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은 ‘세일즈’ 노동자로, 제품 안내와 구매 상담을 담당한다. 그런데 그 외에도 안내판 교체, 청소, 물품 정리 등 온갖 일들을 떠맡고 있다.

제품에 쌓인 먼지를 닦고 터는 일도 세일즈 노동자의 몫이다. 사측이 청소 용역 업체의 청소 횟수를 하루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노조의 태업 지침에는 2인 1조로 사다리 작업하기도 포함돼 있다. 세일즈 노동자들은 안내판 교체 작업을 혼자 해야 했는데, 그러다 떨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한다.

세일즈 노동자들의 책상에는 작은 의자가 있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의자가 있어도 앉을 새가 없다. 대부분 시간제라서 짧은 근무 시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정신없이 해야만 한다. 이케아 사측은 그만큼 착취율을 높이고 시급을 절감할 수 있다.

한 세일즈 노동자는 겨우 숨을 돌리며 말했다. “너무 바빠서 거의 앉을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돌아다녀 가지고.”

인력 부족 때문에 손님도 불만을 쏟아낸다. 아무리 둘러봐도 직원이 없다 보니 기다리다 못한 손님이 직원 책상 위의 전화기에 재다이얼을 눌러서 전화를 받은 아무에게나 따지는 일도 있다.

“가장 위층인 ‘쇼룸’부터 보고 손님들이 계산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뭘 물어보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저 밑에 계산대에서 터지는 거죠. 노조 만들고 나서는 [이것이 사측이 말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냐고도 제기했어요.’ (정유타 이케아지회 지회장)

밀려드는 계산에 화장실도 못 가다

이케아 내부 식당은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곳 중에 하나다.

인력 부족으로 한 노동자가 여러 일을 담당하는 건 이 부서도 마찬가지다. 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음식 계산, 카트 정리, 테이블 관리, 청소, 설거지에 코로나19 QR 체크인 안내까지 1인 다역을 떠맡고 있다.

순식간에 계산 줄은 10명 넘게 늘어났다. 계산 노동자 두 명이 감당하기에는 벅차 보였다. 밀려드는 계산 때문에 화장실도 가기 어렵다. 화장실을 가려면 다른 노동자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러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노동자들은 ‘화장실 자리 비움’ 팻말을 1년 동안 요구했지만 사측은 들어주지 않는다.



혼자서 높은 곳에 있는 커다란 짐을 내리는 지게차 운전자. 아래에서는 물건 위치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높이다

설거지 업무는 식당 노동자들이 말하는 가장 고된 업무다. 화려한 식당 한 칸에서 노동자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끝없이 쏟아지는 설거지거리를 해치우고 있었다. 언뜻 봐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많은데, 정유타 지회장은 “오늘은 태업 중이라 그나마 컨베이어 속도를 제일 느리게 해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느리게 놓고 작업하면 관리자들이 와서 속도를 올렸어

요. 그러면 끝에서 그릇이 밀려서 쏟아지고 깨지고 그랬죠.”

주방에서 요리하는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로 들어야 할 무거운 집기·기름통을 혼자 나르곤 했다. 게다가 이케아가 “지구를 아끼” 도 심형 농장이라며 식당 내부에 대형 채소 재배 시설까지 들여와 노동자들은 농사까지 떠맡게 됐다.

식당 노동자들은 다른 부서와 달리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 그

투쟁에 나선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계속되는 차별에 대한 불만, 터져나오다

양효영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채용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철도의 자회사(코레일네트웍스)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파업과 본사 점거에 들어갔다. 현재는 일부가 본사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지난 1~2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이 정규직 대우는커녕 용역 시절과도 크게 다

르지 않다는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개선되지 않은 처우

문재인 정부가 ‘자회사도 정규직’이라며 포장하자, 공공기관들은 직접 고용하면 저야 할 여러 부담들(차별 해소, 사용자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 구조를 남겨두는 자회사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전환 완료된 파견·용역 비정규직 7만 1000명 중 자회사나 제3섹터(사회적기업, 협동조합)로 전환된 인원은 4만 6960명(65퍼센트)나 된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원했지만,

사측은 자회사의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감언이설을 하는 동시에 직접고용하면 경쟁 채용과 정년 단축(60세)이 불가피하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강요 받고 있다.

게다가 직무급제 도입으로 임금 인상이 매우 제약된다.

“저희 직무급제 표를 보시면요, 1등급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려면 20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1단계에서 2단계 오르면 고작 2만 원 오르구요, 2단계에서 3단계 오르면 또 2만 원 올라가요. 20년 동안 해서 6단계 올라도 대략 20만 원만 올라갈 수 있어요.” (배재환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장)

전환 과정에서 경력과 근속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환자들이 짧으면 5년, 긴 사람들은 7년, 8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 승급제도도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전환 이후에는 2년 내에 승급을 못 시켜 준다고 써 있다고 합니다.” (강시구 지역난방안전지부 용인분회장)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20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열악한 자회사 처우를 규탄하고 있다.

심지어 자회사 전환 후 조건이 더 나빠진 경우도 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후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측이 필

요한 인력은 제대로 충원하지 않은 자회사 근무 체계를 8시간 주간 근무제에서 24시간 내내 업무를 하는 4조 3교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과 업무 강도 강화에 시달리고 있다.

복리후생을 비롯해 온갖 차별도 여전하다.

“복지는 저희가 거의 제로예요. 40만~50만 원 비용이 드는 종합검진이나, 1인당 4만 원 정도 드는 단체 상해보험은 한수원 자회사의 경우 두 개가 다 없어요. 유급병가도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 수당도 없고, 종합검진이나 단체보험 이런 게 다 자회사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적용을 못 하



“비인간적인 스케줄과 착취에 동료들은 떠난다” 이케아 광명점 입구에 설치된 노동조합 현수막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직무급제 도입 정부의 임금 억제 정당화하는 기만

이정원

11월 25일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공익위원이 참가하고,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가하고 있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노동이사제 법제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조 지도자들의 오랜 요구 중 하나이고, 직무급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다. 공공기관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는 노사가 양측이 서로 주고 받은 타협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수용한 나쁜 합의다.

직무급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무에 따른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각 직무에 등급을 매겨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고, 정규직은 근속이 길다고 자동으로 임금·승급이 오르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결국 직무급제 도입이 노리는 것은 임금 차별 정당화와 임금 인상 억제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과 임금 ‘경직성’을 깨는 데 집중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만큼은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려 하고, 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을 통해 전반적인 임금 억제 효과를 내려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제 도입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최근에는 배점까지 높였다.

그러나 직무급제가 도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임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뜰이나 저임금인데다 직무급제 때문에 근속 기간이 길어져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중에는 직무급제가 도입된 곳이 극소수지만, 호봉제와 비교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 반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반발

정부는 이런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더는 늦추지 않으려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반쪽 합의’라고 반발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버텨서 경사노위 합의를 발표한 것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합의문에 명시된 조건, 즉 직무급제를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방 추진을 제어할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직무급제 도입과 안착화 여부로 기관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 ‘자율

적 추진’이 실질적이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도 경영평가를 이용해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를 받아 낸 바 있다.

이번 합의에는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지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로서는 직무급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 지도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계속 앉혀 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속 논의는 직무급제 도입을 전제하면서 그 세부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임금 저하 방지, 성과급 확대 반대 등 노조 측이 제시한 요구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논의는 노조들이 투쟁에 나서지 못하게 불잡아 두는 구실만 할 공산이 크다.

노동이사제

한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동이사가 상임인지 비상임인지, 전체 이사회에서의 비중은 얼마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500인 이상 기관에는 2인 이상의 상임이사를 노동이사로 둔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물론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이사제가 ‘경영권 침해’라며 질색을 한다. 이런 반발 때문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하다.

실사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더라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를 막아 주는 수단 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노동이사는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이런 결정을 좌우할 수 없다. 예컨대, 노동이사제가 가장 발전한 독일에서도 감독 이사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만 캐스팅보트는 주주대표인 의장에게 있다.

또 노동 이사도 기업의 경영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노동자들의 이해만 대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이 상당하다. 이런 압력은 노동이사를 통해 노조에도 가해지기 십상이다. ILO나 법안 발의자 박주민 의원 등은 노동이사제가 기업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노사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는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요한 조건인 임금체계 개악을 수용한 잘못된 합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이 합의에 반대하며 정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에 맞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옳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에 분명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발전시키기보다 정부와 교섭을 통해 관철은 임금체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시간을 까먹은 점은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건 악화를 막으려면, 정부나 사용자들과의 교섭이 아니라 이를 강제할 기층 노동자들의 만만찮은 투쟁에 기대야 한다.



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식당 노동자 ② 손님들에 둘러싸인 계산대 노동자.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 ③ 의자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 바쁜 업무로 그는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다 ④ 계산 담당 노동자들의 경우 고객 한 명을 몇 분 안에 상대하는지가 평가 기준이다. 대량 구매하는 고객이라도 상대하게 되면 성과가 떨어진다

래서 온 나쁘면 쉬는 시간이 점심 시간 이후로 배치돼 밥을 굶고 일할 때도 있다.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식당은 퇴사율도 높다.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퇴사가 잦고, 이는 남은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게차

영업 개시 전, 물류 노동자들은 수많은 상품들을 창고에 채워 넣는다. 부피가 큰 가구도 진열하다 보니 창고 높이가 매우 높다. 가장 높은 층 진열대 물건은 밑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다.

지게차 등으로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물류 노동자들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 지게차 운전자가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

물건 위치를 확인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물류 노동자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숙달돼서 여태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종 물류업계 노동자의 평균 임금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이다. 이케아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이케아는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굴러가고 있다. 적은 인원이 분주하게 일하는 방식이 몸에 밴 노동자들은 “태업이 더 힘들다”며 웃어 보였다.

반면, 이케아코리아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33퍼센트 늘어 66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런 이윤 증대를 기반으로 팝업 스토어와 신규 매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케아는 팽택에도 아시아 최대 규모 물류 창고를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이케아 노동자들은 이 성장의 과실을 전혀 나눠 갖지 못했다. 오히려 끝병과 삶의 불안정을 얻었을 뿐이다.

이미 글로벌 기업 이케아의 착취와 노동법 무시는 여러 나라에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정운택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도 이케아의 노조 탄압 행위가 있었다고 해요. 중간 관리자들이 방해·위압을 가했던 거죠. 노조가 항의했는데 사측은 ‘자기들은 노동 친화적이고 अच्छ고’ 매번 하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노조 탄압 내부 문건이 발견된 거죠. 이처럼 이케아가 노동자를 무시하는 건 한국만의 일도 아닌 거예요.”

고 있는 상황이에요.”(박용규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장)

또 다른 용역회사

그간 공공기관들은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특히 용역업체 선정에서 낙찰률 경쟁을 붙여 더 낮은 비용을 부르는 업체를 선정하곤 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 처우는 더욱 압박을 받았다.

그런데 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수원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혐의회 과정에서 자회사 평균 낙찰률을 94퍼센트로 맞춰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자회사 전환 이후에 사측은 태도를 싹 바뀌어 이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더 줄어든 곳도 있다.

“용역 시절에도 평균적으로 총 인건비의 3퍼센트 정도를 처우 개선비로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3퍼센트였던 걸 1퍼센트로 삭감한 거죠. 처우 개선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배재환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장)

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수의 계약을 보장해 고용은 안정됐다고 하나, 그 수의계약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있어 계약해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자회사가 파업하면 모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파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올려대는 것도 용역회사일 때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불만을 때문에 정부가 ‘바람직한 자회사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들

이 나온다. 특히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모-자 협의회’도 설치한 곳이 거의 없다.

“자회사랑 교섭을 스무 번이나 하고 나니, 이게 자회사만 가지고 노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서 한수원 본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모회사, ‘진짜 사장’이 배후 조종하지 말고 직접 교섭하라고요.”(박용규 공공연대노조 발전분과위원장)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전환 정책은 또 다른 용역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필수적인 업무들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차별을 겪고 있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만은 정당하다. 이런 투쟁들이 더욱 전진하기를 바란다.



조운호 기자

탄력근로 악화시키는 문재인 정부

박설

법무부와 청와대의 윤석열 찍어내기에 제동이 걸렸다.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던 추미애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되레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정부는 지금 물러설 수도, 여권을 향한 검찰총장의 부패 의혹 수사를 두고 볼 수도 없는 처지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이낙연)가 걸린 격돌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국회도 휘감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공수처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총력저지”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노동개악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논란이 많은 노조법 개악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다음 회기로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부·여당 내에서도 흘러 나와 기대를 높이는 듯하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친기업 노동 개악에 한통속인 정부와 주류 양당의 손에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본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공산이 매우 높다.

11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시행연기)이 “연말에 종료된다”고 분명히 했다. 3년간의 시행 연기를 더 연장하기 어려우므로, 내년 1월 시행 이전(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탄력근로제 개악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탄력근로제가 확대돼야 사용자들이 인력 확충 없이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노동자들을 장시간 부리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고, 연장근무 수당의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운동 단체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 주목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것은 큰 약점이다. 올해 들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사람들은 노동자들도 코로나

19-경제 위기 극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국가 경제와 기업 경쟁력을 위해 해고가 아니라면 임금·노동조건 일부 후퇴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위기 극복에 협력하자는 것은 사용자들만 이롭게 할 뿐 결코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불황 타개를 목적으로 시행된 독일 폭스바겐의 고통분담 모델은 그 위험성을 잘 보여 준다. 노조 지도부가 유연근무제(근로시간저축제), 임금 삭감 등을 수용하자, 사용자 측은 시장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이 크게 하락하는 고통을 겪었다.

한편, 조직된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개악에 큰 피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노조들이 단체협약과

조직력을 통해 조건을 지킬 수 있더라도, 미조직·비정규직, 취약노조 등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이 공격을 받으면, 그것이 다시 조직 노동

자들의 조건을 압박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 진지하게 반대해야 한다.

고(故) 김용균 2주기

여전히 비정규직인 김용균의 동료들, 죽음의 발전소도 그대로

신정환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어둡고 위험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로 스물네 살의 젊은 생을 마감했다.

사고 발생 며칠 전 김용균 씨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하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는 그의 유언이 되었고, 이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외주화가 철폐되고 김용균의 동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랐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019년 8월, 김용균 씨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서 죽었다”며 정부에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발전소 민영화·외주화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무비 착복 금지, 인력 총원,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현 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준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은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간만 끌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공기업인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9월 10일 태안발전소, 11월 28일 영흥발전소에서 화물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설비에 깔리고 추락해 사망했다. 김용균 씨 사고와 마찬가지로, 모두 원청인 발전사가 외주(하청)화한 업무들이다.

2015~2020년 상반기까지 일어

난 발전소 산재 사고 243건 중 무려 240건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외주화가 죽음을 낳는다’며 외주화 철폐를 목놓아 외치는 이유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정규직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한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조차 아직 제대로 첫 발도 못 뗐다. 정비 분야는 기존의 외주화(민간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한다며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호기 중 30호기 폐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어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정부와 발전사 원·하청 사측은 이를 (교대제 개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노무비 착복 문제도 여전하다. 안전 강화 조치도 여전히 미흡하다. 2인 1조 인력 총원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총원된 인력은 전부 계약직이다. 정부

와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김용균 씨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외주화 철폐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발전소에서 또 산재 사망!

11월 28일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심장선 씨가 추락사했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의 화물차 운전 노동자로, 발전원료로 쓰고 남은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던 중 4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 사고도 비용 절감에 눈이 멀어 발생한 기업 살인이다. 심장선 씨는 흩날리는 석탄재를 담은 위험한 일을 혼자 해야 했다. 주변

엔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제대로 된 안전 장치나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와 발전사 모두 위험 요인들을 알면서도 방치해 왔다. 더구나 사고 후 남동발전은 뻔뻔스럽게 고인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 벌이를 우선하는 이윤 논리가 잇따른 비극을 낳고 있다. 안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